

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

2004. 9. 17

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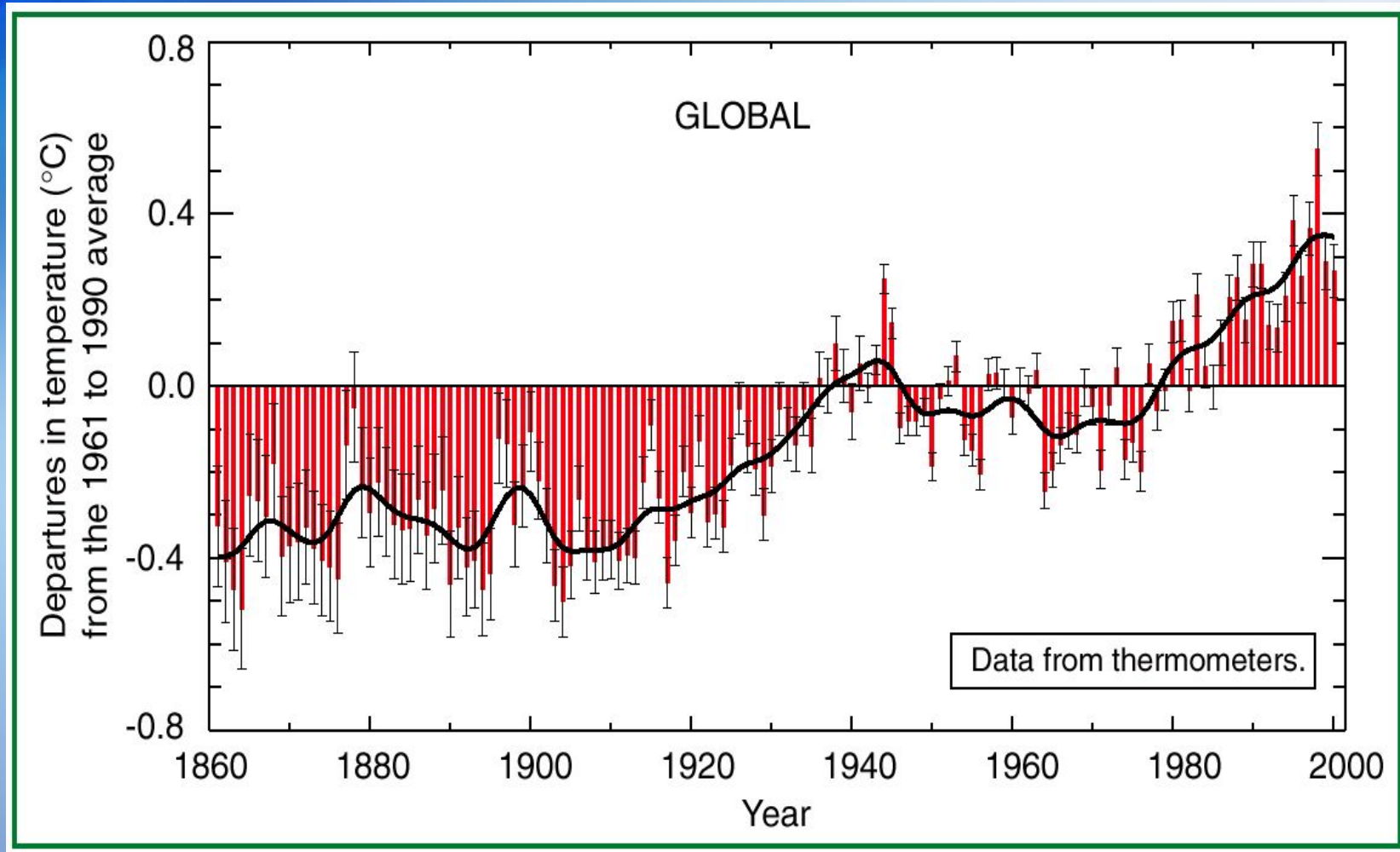
1. 기후변화와 대응정책

1.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

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(IPCC) 3차 보고서(2001)

- 인간의 활동이 과거 50년간의 기온 상승을 유발했다는 새롭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
 - 20세기에 지구평균기온 0.6℃ 상승
 - 21세기말까지 1.4-5.8℃ 상승할 전망
 -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기 280ppm에서 2000년 370ppm로 33%증가

<그림 1> 계기관측 자료로 본 기후변화



출처: 김성균, “기후변화와 자연재해”(기상청)

2. 기후변화의 결과

기후변화와 담수

-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질의 변화 유발
- 수량의 변화가 일어나 국가 차원의 수자원 운용 차질

기후변화와 토지쇠퇴

-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가속

기후변화와 지상오존

-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대류권 오존으로 대기오염
- 오존층파괴 → 유해자외선 증가 → 기후시스템 냉각

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, 농업, 임업

- 기후변화는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줌
- 농작물 생산성이 일시 증가하기도 하나 대개 부정적

〈 표 〉 기상에 의한 피해 규모 (2000년 기준)

인명 피해(명)		재산 피해(미화 백만달러)	
호우	2,807	가뭄	5,960
한파	420	호우	3,184
저기압, 태풍	321	저기압, 태풍	2,171
낙뢰	137	눈	536
고온	85	토네이도	487
토네이도	51	해빙	201
안개	28	우박	20
해빙	24	한파	20
눈	20	조고	2
뇌운	9	강풍	2
강풍	7		
가뭄	3		
우박	2		
총계	3,914	총계	12,58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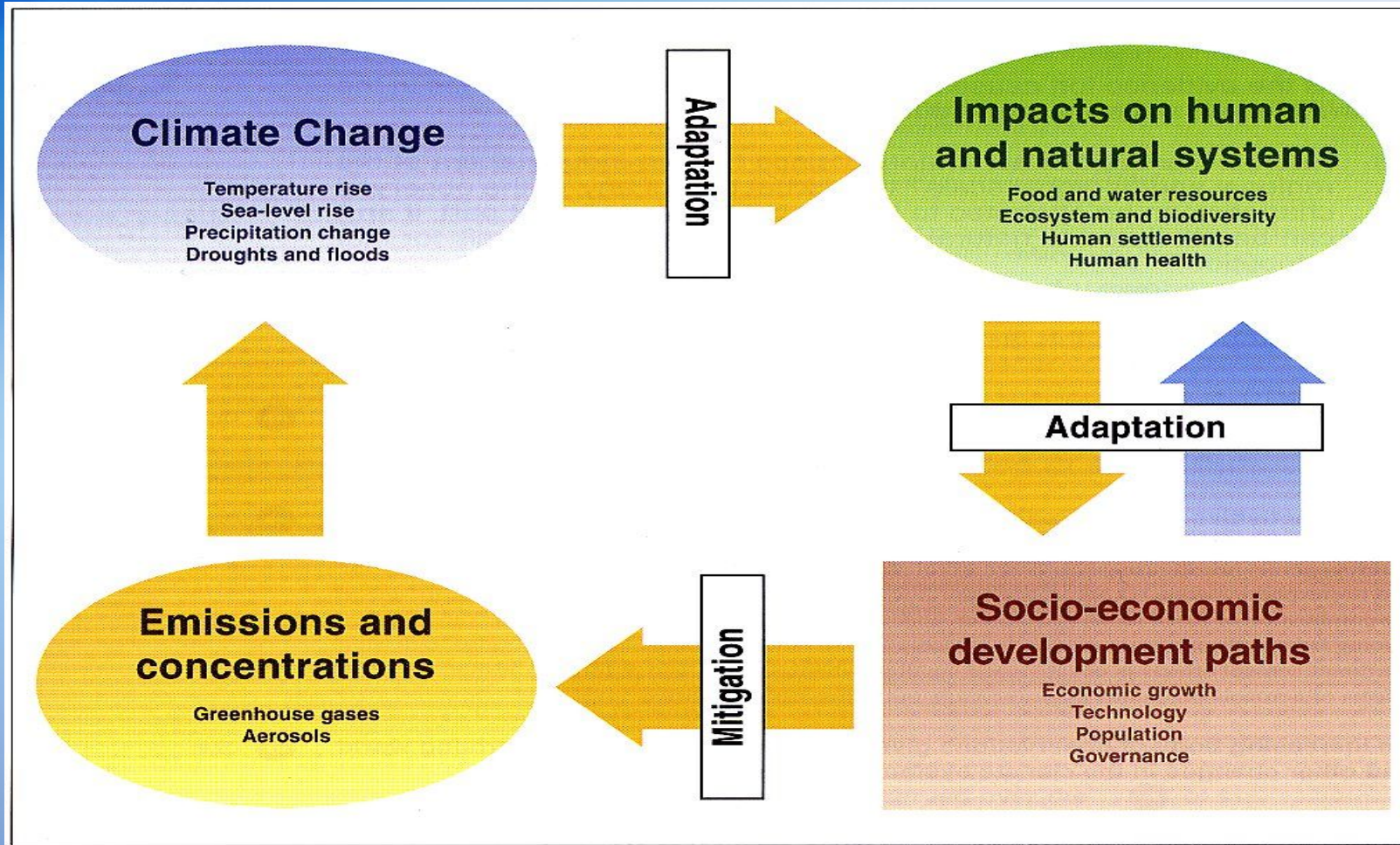
주 : 전세계적으로 호우, 태풍, 가뭄 등의 기상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, 도시화와 인구집중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늘어나고 그 자산가치도 상승하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음. 이 자료는 전세계 인구의 약 70%를 대표하는 72개국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임

자료: Conford, S, G, 2001; Human and economic impacts of weather events in 2000, WMO Bulletin, 50,2-300

출처: 기상청, 기후변화정보센터(www.climate.go.kr)

3. 기후변화의 대응 정책

〈기후변화의 평가 및 대응 체계〉



출처: IPCC(2001)보고서

기후변화에 대한 완화(mitigation) 대책과 적응(adaptation) 대책

- 기술적 대책: 온실기체 감축, 청정에너지 개발(완화대책)
- 과학적 대책: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과학적 평가(적응대책)
- 우리나라는 기술적 대책 위주이며 과학적 대책 미흡
- 완화위주 대책에서 장기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대책 병행

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

- 분야별로 과학적 영향평가,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
- 통합적인 국가대응시스템 및 조정 기능 필요

II. 기후변화협약과 대응정책

1. 기후변화협약의 개요

협약의 의의

- 환경협약 :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환경협약
- 경제협약 : CO₂ 저감을 위한 국가간 기업간에 비용문제 발생
- 새로운 기술규범 : 온실가스 관련 기술 보유여부가 국가 경쟁력 좌수

협약의 기본원칙

-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
- 개도국의 특수사정 배려
-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
-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성 성장 보장

협약의 주요 내용

- 공통의무사항 :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보고서 작성, 제출
- 특정의무사항 : 1990년 수준 온실가스 감축 노력(ANNEX I 국가) 등

2. COP3 합의 내용

구 분	내 용
감축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의무기간(2008 - 2012) 동안 '90년 대비 5.2% 감축 - 국가별 차별적 목표 부여 : 미국 7%, 일본 6%, 유럽연합 8% 등
이행수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용최소화를 위한 유연성체계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정개발(CDM), 공동이행(JI), 배출권거래(ET) ○ 흡수원의 인증

3. 기후변화협약의 쟁점사항

교토의정서의 발표 여부 : 러시아의 비준 여부가 관건

- '90년 기준 총배출량의 44.2%인 124개국 비준
(배출량 55%이상 국가비준시 발표)

개도국의 의무부담 문제 : 향후 논의 핵심 의제

- 2005년부터 2차 의무기간(2013 - 2017)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협상 개시

적응문제의 부각 :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기상재해 해결 불가능 인식

- 새로운 공약협상의 출발점 전망(현재는 기금조성 및 지원에 한정)

4.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방안

우리나라 입장

- OECD 가입국으로 Non-annex I 국가 : 한국, 멕시코
- 우리나라의 상황 :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 위로 2010년에 '90년 대비 3배 도달
- 선진국의 자발적 참여 등의 압력 가중 ⇒ 의무부담 여부가 아닌 시기와 정도의 문제

대응방안

- 개도국 참여의 본격화를 대비해 파급효과가 최소화 되는 의무부담 방안 마련
- 멕시코, 브라질 등 상황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
- 교토의정서 국내이행 기반 구축 : 기술별 인벤토리, 청정개발체제, 배출권 거래제 등
- 새로운 국제기술 규범에 적극 참여 : 기술개발 촉진 및 세계시장 참여

5. 우리나라 정부 대응 체계

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(국무총리)

실무위원회 (국무조정실장)

실무조정회의 (경제조정관)

총괄 대책반 외 5개 대책반
[협상, 에너지/산업, 환경, 농림, 연구개발]

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그룹

6.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

제2차 종합대책 : 5개 부문 84개 과제

-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 강화 : 국무조정실, 외교부
- 온실가스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 촉진 : 산자부, 과기부, 환경부, 해수부 등
-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: 산자부, 건교부, 환경부, 농림부, 산림청, 해수부 등
- 교토메카니즘 통계기반 구축 : 산자부, 국무조정실
-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: 산자부, 환경부, 교육부 등

7. 그간의 평가와 개선사항

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: 기후변화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개선 필요

- 조직과 인력의 부족 : 범정부대책기구 및 대응전략의 효율적 운영 미흡
- 부처별 기후변화협약 인식 차이 :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전략 수립의 한계
- 시행부처별 목적에 따른 정책 운영 : 정책별 연계 운영체계 부족
- 온실가스저감 중심의 정책 추진 :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미흡

개선방향 :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협상 전략 재정립

-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구성 운영 중

III.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정책

1. 수요관리정책 – 1차 에너지

현 황

- '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수요관리가 주요 에너지정책의 하나로 등장
 - 동자부 신설('78),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('79), 에관공 설립('80)등
- '00년대 : '03년 수요관리 예산
6천4백억원 (용자 : 5천150억원, 출연 : 980억원, 보조 : 270억원)

문 제 점

- 수요관리 실적이 미흡
- 원인
 - 에너지 저가격 유지로 관심 소홀
 - 정책 우선 순위 낮으며 조직과 인력이 불안정
 - 부처간 및 민관간 협동 미흡

개선방안

- '15년 10%목표달성 위한 “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로드맵” 수립 및 국민참여 확대
 - 수요관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후변화협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원전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

<참고자료> 에너지 수요관리 주요 항목

산업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진단·지도 강화
가정·상업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용기기 고효율화 (효율기준 강화, 최저효율제 확대, 대기전력 절감 등) ▪ 주택,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(설계기준 강화, 호텔 등 다소비건물 관리) ▪ 에너지 수요관리사업 확대(에너지절약기업(ESCO)사업 등)
수송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동차 연비향상 (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, 평균연비제, 공회전 방지) ▪ 교통, 물류 시스템 개선
기반조성 (공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금융, 세제 개선 ▪ 기술개발 강화 (에너지기술개발10개년 계획 등) ▪ 고효율 열병합발전 시스템 보급 촉진 `
국제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보, 조사, 협력 (IEA, APEC등 다자간 및 양자간 사업) ▪ 동북아 에너지 협력 추진

2. 신·재생에너지 개발 · 보급(1)

현 황 (산자부 계획, '03)

- 보급목표 : 2011년 총에너지 5% (2003년 실적 2.1%)
 - 선진국 2010년 목표 : 일본 6.1%, 미국 5.4%, EU 12%, 덴마크 13.5%
 - ※ 출처 :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(2000 - 2002)
- 총 소요사업비 : 9조1천억 (보급 용자 제외, 실질 지원은 6조원)
 - 3대 기술개발사업단 운영 :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 집중 지원
 - 설비 보조지원 : 태양광 10만호사업, 시범마을 (Green Village) 100개소, 풍력발전단지 (Wind Farm) 조성, 연료전지자동차 3천여대 등
 - 실증연구단지 조성·운영, 발전 차액보전, 지역 에너지사업 등
-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
 - 신·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차액보전 제도 ('02.5)
 - 공공기관 신축건축물 신·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('04. 4) 등

신·재생에너지 개발 · 보급(2)

문 제 점

- 보급목표(5%, 2011년): 의욕적 목표이나 조직과 예산 뒷받침 필요
 - 선진국들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, 보급목표를 높게 설정함
 - 우리나라는 기술수준, 경제성이 매우 낮아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움
 - ※ 태양광 716.4원/kWh, 풍력 107.6원/kWh, 전력거래단가 54.4원/kWh
 -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폐기물에 편중됨(93%)
- 총 사업비(9조 1천억): 재원확보가 불투명함
 - 9조 1천억원 예산 자체도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흡함
 - 일본의 예 : 약 20,912억엔 ('03~'11)
 - 보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지원 방안 미약

신·재생에너지 개발 · 보급(3)

개선방안

- **보급목표 : 기술개발과 보조금 지원정책을 통한 목표의 달성 가능성 제고**
 -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필요 : 기술개발 및 해외 기술확보 병행
 -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향상, 양산체제 구축
 - 예 : 태양전지 효율 2003년 12%에서 2010년 18% 달성이 목표
 - 보조금 지원정책: 초기시장 창출, 생산 코스트 저감이 가능
 - 예 : 태양광 비용 2003년 15,000원/W에서 2010년 6,000원/W 달성이 목표
 - 신재생 에너지 자원 잠재량 조사 평가 실시를 통한 지원 효율성 강화
 -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,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비중을 대폭 확대
- **총 소요 사업비**
 - 에너지자원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확보 선행 필요
 - ※ 발전용 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징수 (현재 징수제외 대상) 검토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(관계부처와 협의 필요)
 - 원별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지원방법, 효과적인 예산집행 방안 필요
 - 의무할당제 (RPS) 및 민자 유치 등 예산 경감 노력 병행 실시

신·재생에너지 개발 · 보급(4)

제도 개선

- 민간 투자계획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
- 산업자원부내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기관 전문인력 확보
- 신·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 기능 강화 (과기부, 환경부, 민간전문가 등)

기대효과

- 원전의 단기적 대안 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 “수소경제” 중심의 세계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차세대 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
- 2011년까지 총 전력의 7%공급 (1 GW급 원전 2기 해당), 열원은 석유 6,400만 배럴 (우리나라 1개월 소비량) 대체효과
-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육성 파급효과 (반도체, 자동차 등)

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

“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” (WCED의 Our Common Future ; 1987)

- 1992년 유엔환경·개발회의(UNCED) :
리우선언과 의제21 채택

의제21의 이행평가를 위해 유엔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(UNCSD)를 설치,
추진상황 점검

-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(WSSD) :
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채택

물·에너지·건강·생물다양성·빈곤 등 핵심쟁점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10~20년
간
지구전체가 추진할 과제와 이행계획 합의

- 이념의 확대

환경과 개발의 조화 → 경제·사회·환경의 균형발전

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

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
미래지향적인 이념



국제기구와 선진외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

※ OECD, 미국, 일본 등도 지속가능발전 관련계획 수립·추진



UN (UNCSD)

-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·보급
-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평가



EU

-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·보급
-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방안 논의



영국

- 「보다 나은 삶의 질 :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·시행」 (1999)
-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
지속가능발전 현황평가 및 정책실행 지원 등



독일

- 「독일의 전망 :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전략」 (2002)
-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, 지속가능발전 현황평가 및 국민인식 교육 등

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실태

경제·사회·환경의 불균형 발전

경제적 지속가능성 지표

- 국내총생산 **13위**, 1인당 국민총소득 **54위**(2001년)
- 에너지 세계 **10대** 소비국

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

- **소득불균형** : 최저소득(1분위)과 최고소득(10분위)의 소득격차 점차 심화
-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나 다양한 이해·가치관 갈등, 사회통합과 연대감 부족

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

- 세계경제포럼(WEF) 환경지속가능성지수 평가 : 142개국 중 **136위**('02)
 -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는 환경성과지수 : OECD 23개국 중 **15위**

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간의 성과와 한계

성 과

- 새로운 가버넌스(New Governance)의 시범적 운영
주요사업추진에 다양한 이해당사자(multi-stakeholder)들이 참여, 의견수렴을 거치는 새로운 의사결정문화 형성에 기여
- 국가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,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보완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

한 계

-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제고에 실패
- 정부부처간, 정부·민간간, 정부·산업체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시스템 부재

조직도



5대 핵심과제 선정 및 추진

정책의 시급성, 국민의 요구 감안

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

- 물, 에너지, 국토 등 분야별 기본계획 마련

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국가 주요 갈등사안 자문

- 시스템 구축으로 갈등 사전예방과 해결절차 제도화
- 국가 주요 갈등사안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 자문

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

-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 의거 각종 계획 수립 유도

5대 핵심과제

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

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

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

지속가능한 국토·자연관리정책

세계지속가능발전 핵심과제 이행·지원

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



갈등의 조정·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

- 세부 정책과제
 -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그램 개발
 - 정부조직 내부역량 강화와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
 - 갈등해결관련 각종 기구와 법률정비
- 갈등관리정책연구팀 발족('03. 10. 4) 및 활동
 - '04. 2월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령께 보고

내각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가적 갈등사안에 대한 자문

-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,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안 도출

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



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본계획 마련

■ 세부 정책과제

-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
-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
- 최적 에너지 믹스 전략 추진
- 에너지 기술혁신 방안
- 기후변화협약 대응

■ 에너지정책연구팀 발족('03.10.23) 및 활동

- '03.12월중 논의구조 및 추진방향에 대한 중간보고
- '04. 6월 참여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구상을 마련, 대통령께 최종보고

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



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본계획 마련

■ 세부 정책과제

- 통합적 수자원 관리정책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조정체계 구축
- 사전예방적·과학적 수질관리대책 구축
- 종합적·체계적 물수요관리대책 구축
- 상습 물부족지역 해소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대책 확립

※ 물 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

■ 물관리정책 연구팀 발족 및 활동 예정

- '04. 7월중 참여정부의 물정책기본계획을 마련, 대통령께 자문

정책형성단계: 정책연구 및 수립

전문위원회 주관하에 연구팀 구성

-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직접 과제를 수행할지, T/F등을 별도 구성할지 결정
- Task Force(소위원회) 구성 시에는 해당과제에 적합한 전문가 발굴, 구성
 - 평소 해당 전문위원회별로 전문가 pool DB 구축
 - 전문가 pool에서 해당과제별 적합한 전문가 추천
 - 시민사회, 산업계 등에서 구성원으로 참여
- 자문위원회
 -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

연구방식 결정

- 전문가가 해당분야 집필하고 전문위원회 등 검토, 기획운영실 지원
- 주1회 이상 토론식으로 진행하되, 필요 시에는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, 토론회 병행

연구보고서 작성 및 정책수립

- 본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
- 발표 형식의 슬라이드

에너지정책 수립의 예

- 에너지 안정수급 실현 및 선진 수준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
-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성공여부가 관건

2000년대

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정책
필요성 대두

1990년대

에너지이용 효율화 · 에너지산업의 점진적 자유화시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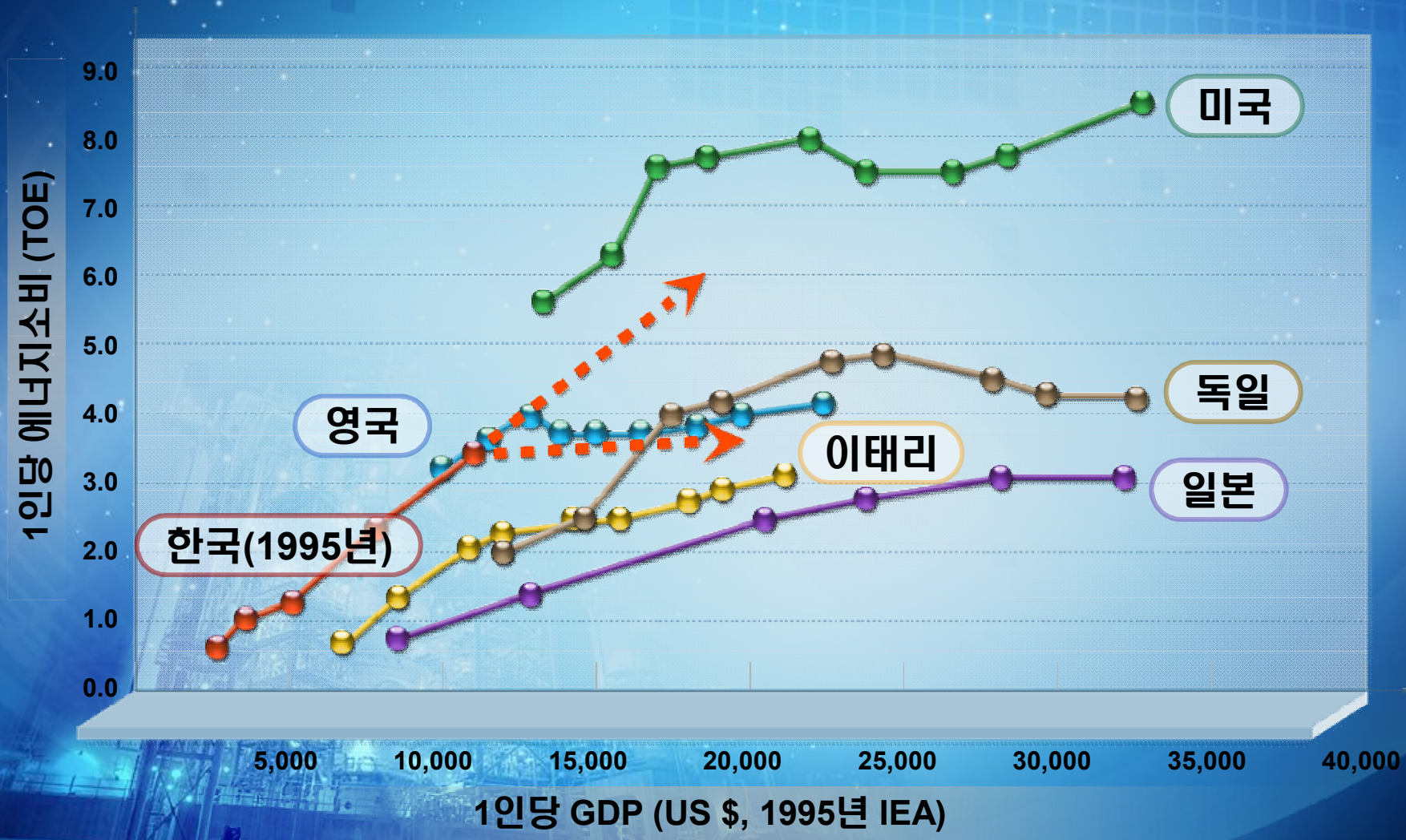
1980년대

에너지원 다원화시책 추진
(원자력·유연탄·천연가스 발전소 건설,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)

1970년대

경제개발을 위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에 역점
(석유파동 극복)

주요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에너지 소비 추이 (1960 ~ 2000)



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요인

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증대

- 중동,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안요소 상존
- 중국의 고속성장과 석유수입 급증가로 국제에너지 수급 불균형 우려

※ 일 평균 석유수입량

중국 1.7백만배럴(2001) → 4.2백만배럴(2010) / 한국 2.2백만배럴(2002)

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가시화

- 2005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추가의무부담 논의예상 (2013년부터 의무부담압력 가시화)
-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심화로 사회적 비용 급증

에너지문제 해결책으로서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

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요구 및 NIMBY현상 심화

갈등관리의 배경 및 접근방법

사회 갈등이 누적되면서 그 양상이 복합적으로 전개됨

-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됨에 따라

억압형 → 잠재형 → 표출형 → 확산형 으로 갈등양상이 변화

- 합리적 협상과 이익의 조화보다는 감정적 대립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 노출

- 시스템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없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어려움

갈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이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의 도출 필요

- 분야별 사례연구와 연구결과를 DB화 하고 갈등현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 마련
 - 국내 갈등관리 시스템을 진단하고 선진국의 제도운영을 분석, 시사점 도출
- 갈등관리방향에 대한 법·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선·정비방안을 제시

갈등관리 정책목표

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

-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 관행을 개선

갈등관리 프로세스 개발을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

- 갈등예방 프로세스의 설계
-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설계

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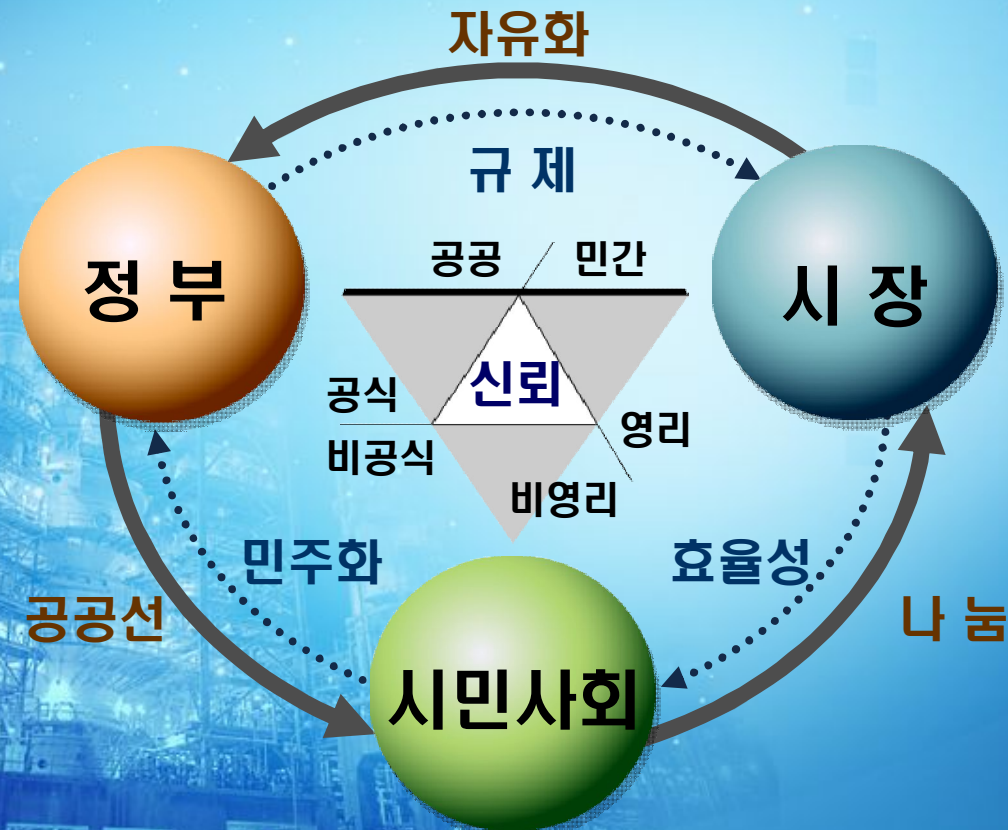
- 학생, 시민, 공무원 대상
- 갈등관리지원센터 등의 신설을 통한 갈등연구 및 교육훈련 강화

법·제도 정비를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시스템의 정착

- 사회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제고

갈등관리정책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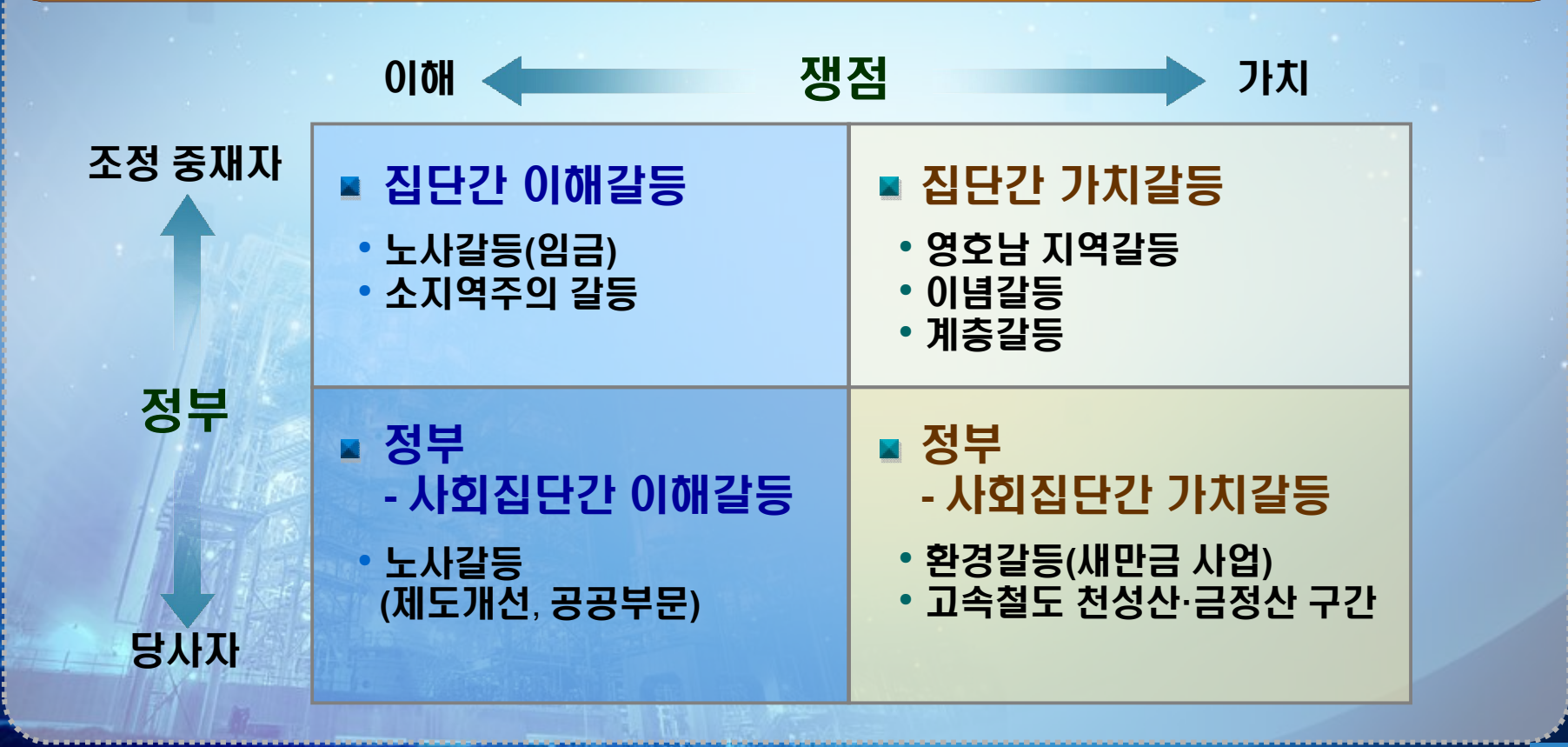
- 정부·시민사회·시장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뢰 구축
- 합의와 설득절차를 통한 타협과 협력문화 형성
- 공정성·전문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권위 확립



갈등유형 분류 - 정부의 역할 및 갈등 원인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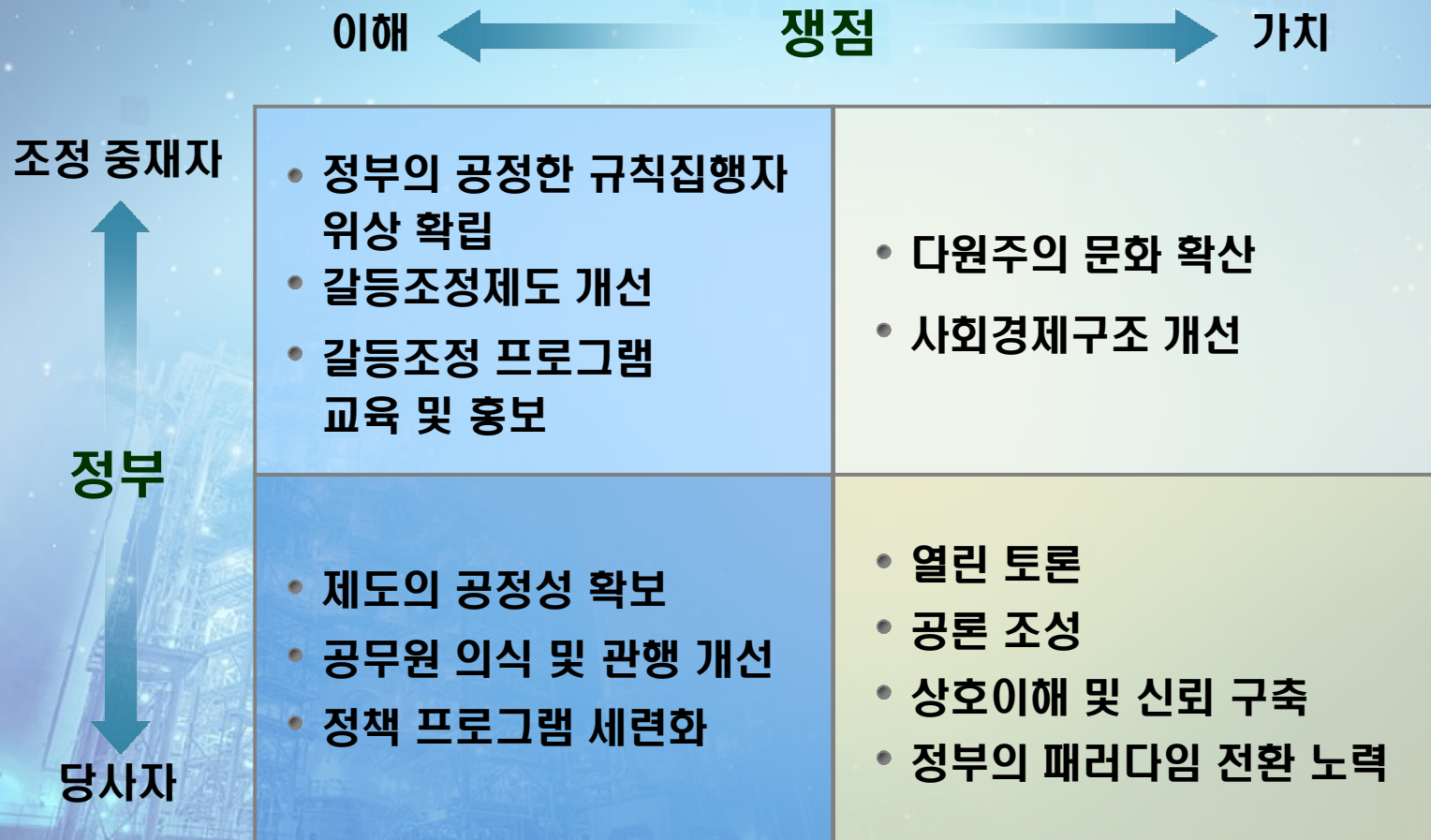
사회갈등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함

정부의 역할과 갈등의 원인(쟁점)에 따른 분류



갈등유형 분류 - 정부의 역할에 따른 해결방안

정부의 역할과 갈등의 원인(쟁점)에 따른 유형별 해결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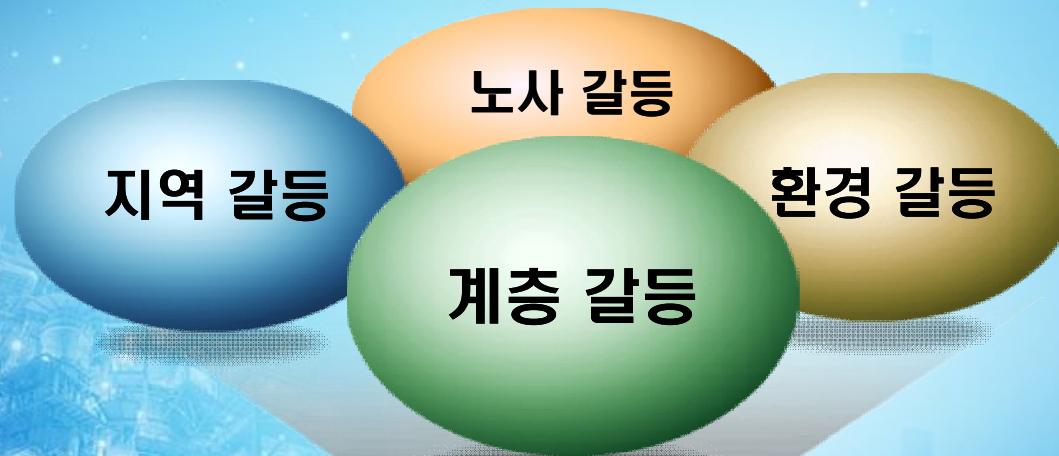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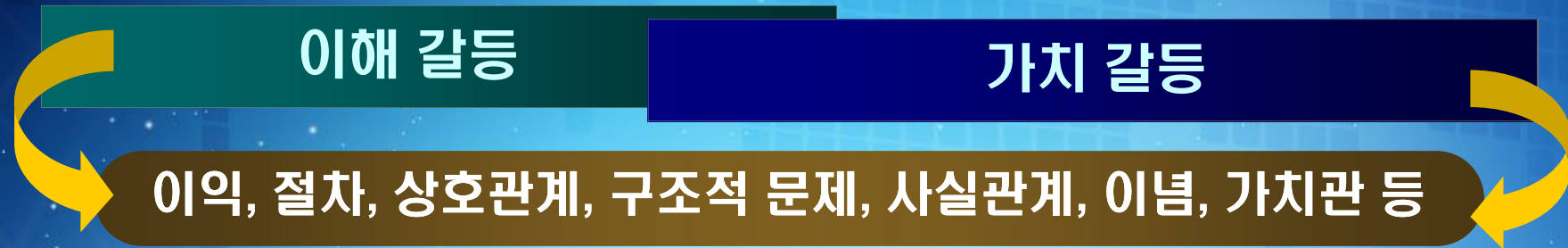


갈등관리정책 기본방향 - 갈등유형별 대응방안

■ 정부·시민사회·시장 부문에서 갈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

	정 부	시민사회	시 장
지역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간 산업불균형의 해소 ■ 지자체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■ 지역간 산업불균형의 해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갈등해결형 시민운동 활성화 ■ 지역간 문화교류 사업 확대 ■ 언론의 순기능적 역할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경제의 활성화
계층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·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종합검토 및 정책방안 제시 ■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 ■ 시민적 덕성 형성 ■ 더불어 사는 문화형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당한 부의 축적 이해 ■ 기업의 사회안전망 기여
노사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뢰구축과 법치에 의한 규율 ■ 노사정의 사회적 협의 강화 ■ 조정 및 중재의 활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합리적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규범 확립 ■ 사회적 대화 활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투명한 경영 ■ 노사간 신뢰형성 ■ 사적조정 및 중재의 활성화
환경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무총리실 조정기능 보강 ■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 참여 ■ 갈등조정과 합의문화 형성 ■ 환경갈등해결 시민사회 형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오염자부담의 원칙 ■ 환경경영

갈등관리정책 기본방향 - 갈등유형과 대응프로그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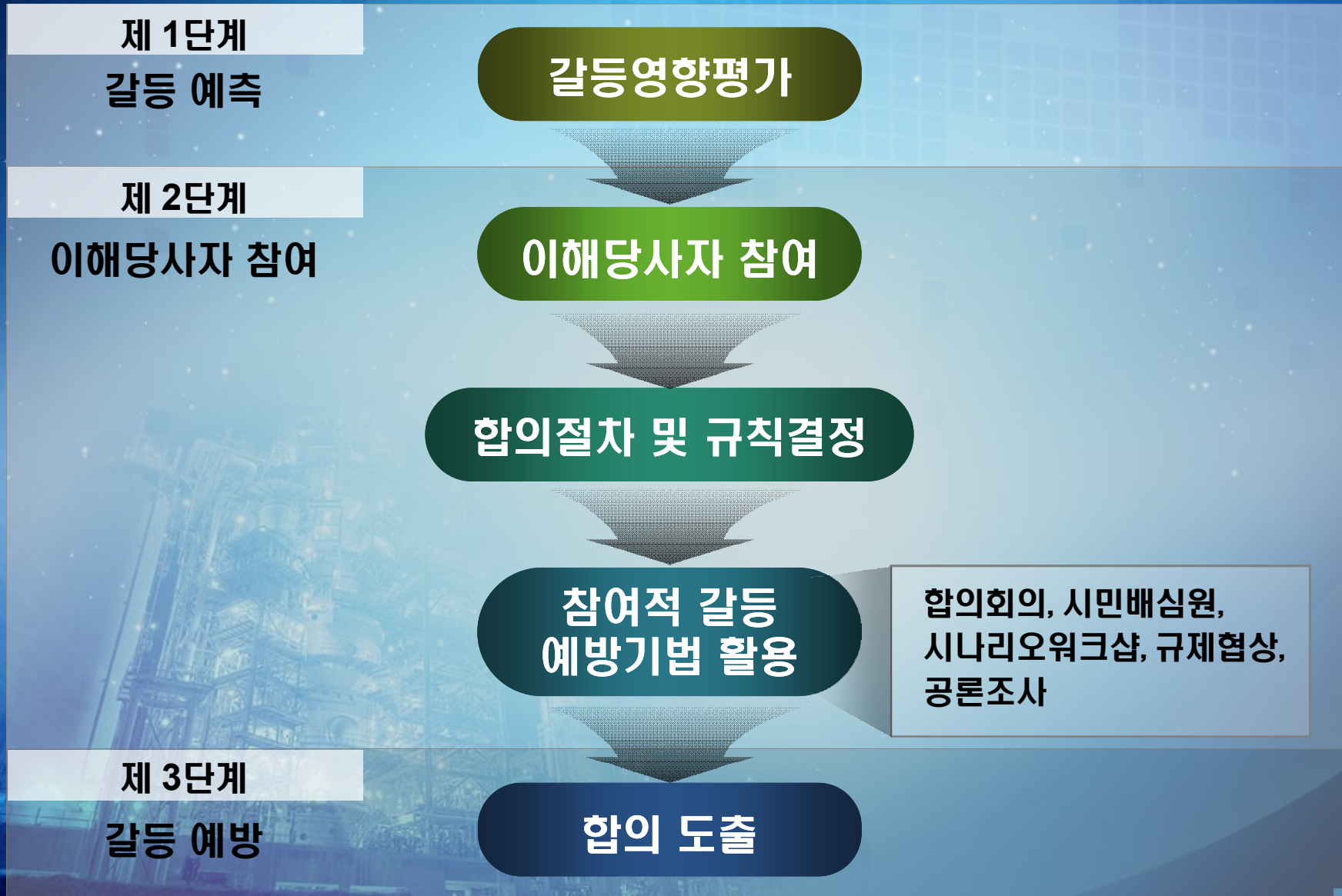
예방	사실확인	시나리오워크샵	시민배심원
협상	중재	합의회의	규제협상
조정	정책다이얼로그	공론조사	공생의 장 창출

갈등관리 프로그램 개선

선진국의 갈등관리 프로그램 중 우리 실정에
적합한 제도를 적극 도입



갈등예방 프로그램 - 일반적 절차



갈등예방 프로그램 - 갈등예방 방법과 그 적용범위

	갈등의 성격	갈등의 범위	이해당사자	대표성/ 심사숙고성	성격/사례
합의회의	가치갈등	전국적·지역적	전국민	대표성 낮고 심사숙고성 높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가 의견수렴 · 생명복제기술
시민배심원	가치갈등	전국적·지역적	전국민	↑ ↓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조화된 시민참여 · 수질문제, 조세문제
시나리오 워크샵	가치갈등 이해갈등	지역적	지역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, 전문가, 산업계, 시민참여 작업모임 · 지역포럼
규제협상	가치갈등	전국적·지역적	뚜렷한 이해 당사자 존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규제에 영향받는 집단과 합의 · 규제정책
공론조사	가치갈등 이해갈등	전국적·지역적	전국민/ 특정집단	대표성 높고 심사숙고성 낮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률표집으로 대표성을 가진 집단의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

■ 상황에 따라 변형해 활용할 수 있으며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
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사회 저변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	초·중·고등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규 교과목 편성·운영을 권장 ▪ 교내 “또래간 문제해결 프로그램” 운영을 통해 학생들 자체적으로 교내폭력 등의 갈등해결 유도 및 갈등관리의 생활화
	대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갈등관리 관련과목 편성·운영을 권장 ▪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갈등관련 전공과정의 개설 권장 및 지원
	시민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민단체 중심의 갈등관리 프로그램에 정부와 관련기관의 제도적인 지원 ▪ NGO 활동가 교육 및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
정부조직 갈등관련 내부역량 강화	현장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행정, 갈등에 대한 이해 및 협상 / 조정능력 향상교육 실시
	일반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행정, 일반적인 갈등관리능력 제고 및 정기적인 교육
	전문가 그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책갈등이나 사회갈등에 직접 투입되는 갈등관리 전문가 (강사) 육성

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민간전문가
양성을 통한
전문
중재서비스

전문가 양성

- 갈등관련 전문교육 후 공인 조정중재자로서 활동
- 기존의 전문가 중에서 변호사, 노무사 등 관련 국가공인 자격사의 경우 일정기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(예: 4주 과정) 이수 후 공인 조정중재자로 활동

갈등관련
전문연구

전문연구기관
설립 및 지원

- 다양한 분야별 전문연구의 활성화 - 재정 지원 및 제도 활성화
- 외국 이론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
- 우리 문화에 맞는 갈등관리 방식의 개발

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- 법(안)의 주요 내용

	주요 내용
총 칙	-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, 갈등관리의 기본 원칙
국가와 지자체의 책무	-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 및 의견수렴의 확대 -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- 갈등관련 교육,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원
갈등관리 지원기구	- 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 -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업무
전문조정중재인	- 중재자의 자격, 양성 및 활용 - (가칭) 한국조정중재협회 설치

■ 추진계획 : 「갈등관리기본법」 제정 추진단 구성·운영

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

- 참고자료 : 외국의 갈등관리 관련법과 제도 현황



미국

- 행정분쟁해결법(1990년), 협상에 의한 법규 제정법(1990년)
 - 대안적 분쟁해결(ADR)을 분쟁해결의 주요방법으로 채택
 - 분쟁해결 전문가 활용
 - 공무원 분쟁해결 교육훈련 실시



EU

- 독일의 경우, 국토 도시계획 및 기타 공공사업계획법제에서 계획형량제도를 통한 갈등관리 원칙 의무화
 - 공공사업계획의 계획확정절차 시행으로 절차적 정의 확보 및 갈등의 사전조정
- 네덜란드의 경우, 이해당사자가 정책형성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기획제도 운영(InfraLab)



일본

- 일반적 갈등관리방안으로 ADR 기본법(안) 입법화 추진중

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추진

필요성

-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갈등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수립·지원
- 사회갈등에 대한 조정 및 관리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
- 갈등 예방 및 관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연구 활성화

역할

